

#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급여 착오지급

광주시 한 산하기관이 직원의 호봉을 낮게 책정, 급여를 잘못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11개월 간 7호봉인 직원의 1호봉을 누락, 6호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다른 직원과 비교해 최근 알게 됐으며 기본급과 추가·연장수당,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모든 수당이 잘못 계산됐다"면서 "해당 직원의 급여 착오지급은 인사 이후 5차례에 달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 직원 호봉 잘못 반영 기본급·수당 등 적게 지급 센터 "미지급분 지급...프로그램 도입해 개선"

또 "다른 직원들도 연장수당과 초과근무시간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어 소급적용해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는 "센터의 급여 관련 전산프로그램과 허술한 운영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017년 시정감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지적돼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했으나 호환이 안돼 아직까지 사용 못하고 있다"면서 "급여 지급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하기관인 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와 시의회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약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은 담당자의 명백한 실수임을 인정한다"면서 "지난해 12월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미지급분을 합

산해 지급했으며 복지포인트는 미지급분을 포함해 올해 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입한 회계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그룹웨어를 지난해 9월 구입, 구축작업을 거쳐 시범운영 중이다. 조만간 급여지급프로그램도 구입해 관련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는 광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 2008년에 설립됐으며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 종업원 강제추행 50대, 무전취식으로 덜미

식당 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뒤 도망친 50대 노숙자가 인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2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여성 종업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 날인 25일 오후 6시께 수원역 인근의 다른 식당에서 2만 5000원 어치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무전취식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신원을 확인하던 중 전날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 인임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날 발생한 사건을 숙지하고 있어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무전취식한 전력이 있고, 제법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 제주 횡단보도서 70대 승용차에 치어 숨져

29일 오전 6시께 제주도 애월읍 광령2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문모(63)씨가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79)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강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문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검찰, 법원 공무원 '리베이트 뇌물' 적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식의 리베이트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법원 공무원 윤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면서 방송 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공사대금 1500만여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윤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전·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전직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급 직원이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발한 바 있다.

## 9억 상당 가로채 잠적한 60대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수 역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A(62·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B씨에게 "딸이 귀신병에 걸렸는데 내가 쉽게 번 돈을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 동생처럼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속여 총 28차례에 걸쳐 3억4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만원짜리 목욕관리 서비스를 받고 탕을 포함해 10만원을 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B씨와 친분을 쌓은 이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과 사업자금, 각종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B씨 이외 3명에게서 5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잠적했고 A씨에 대해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중 1건의 사기범행은 오는 27일 공소시효 만료될 예정이었다.

뉴스



구제역 확산을 막아라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에 마련된 구제역 거점소독소에서 방역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양대노총 경사노위 불참' 광주형 일자리 영향은?

### 직접적 영향 없지만 노동환경은 악재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 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상이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악재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경색된 노동환경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모색했지만 노동계의 마음을 풀리지 못했다. 더구나 노동계는 다음달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노정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노동환경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원만한 채널이 유지될 경우 현 정부 핵심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 불참의 핵심에는 광주

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해 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시는 일단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직접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불뚱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파트너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인만큼 중앙단위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노동환경이 경색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동계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경찰청, 설 명절

### 음주운전 집중 단속

광주경찰청이 설 명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펼친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설 연휴인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기동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광산IC를 비롯해 광주진출입로와 광주터미널, 송정역, 서광주농수산물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과 사고다발지점이다.

단속 중 적발되면 강화된 음주운전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설 명절 음주 교통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18일 음주운전 법 강화 이후 단속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월22일까지 2개월동안 면허정지 296건, 취소 291건 등 총 587건이 적발됐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각각 142건, 205건, 총 347건으로 40.9%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명절에 단속하겠어, 소주 한잔인데 어때요 생각하며 운전할 경우 단속될 것이다"며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